

(미래정책연구실, 2009.07.27)

## □ 보조금 개편 논의 경과

- 5.18일 제4차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에서 농업보조금 개편 일반원칙 및 주요 사업별 개편방안 통과
- 5.20일 제3차 기획위원회에서 영세·고령농 보완대책과 함께 논의 후 본위원회에 상정키로 하고, 6.19일 제8차 소득안정·삶의질 분과위원회 및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논의
- 7.21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기획위원회: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농업보조금 개편에 합의
- 향후 ‘운영협의체’를 구성하여 288개 이르는 개별 보조금 사업개편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
- 7.27일 열리는 본위원회에서 보조금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함.

## □ 보조금 총액 유지

- 1) 보조금 전체 규모와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유지
  - 보조금 총액: ('09) 11.2조원 → ('10년 이후) 현수준 유지
    - '09 예산: 보조 11.2조원 (76.9%), 용자 2.9(20.1), 기본경비 0.4(3.0)
  -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조금 총액('09년 5.2조원)도 현수준을 유지

## □ 보조금 지원 일반 원칙

- 1) 보조금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전환
  - 보조사업과 용자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
  - 사업효과가 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지원은 용자사업으로 전환
  - 공공성이 낮은 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장치 마련
  - 기상이변에 대응한 재해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## 2) 보조금과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제고

- WTO/DDA 등 국제 보조금 규범과 배치되는 보조금 개편·보완
- 보조금 사업 성격을 감안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체계 마련
- 투입재 보조 또는 가격지지를 환경 및 시장친화적으로 전환

## 3) 일회성·소모성 보조를 지양하여 보조금의 효율성 제고

- 교육·훈련, 연구개발 및 농업금융 등 Soft 인프라 확대
- 개별 경영체 시설에 대한 보조를 가능한 한 공동이용시설 또는 인프라 지원으로 전환
- 대규모 기업농에 대한 개별시설 보조는 축소·중단하고 필요시 인프라 또는 공동시설지원에 한정
- 실질적인 수급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품목단체가 구성된 경우 개별경영체 지원에 있어서 품목단체 추천 등 역할 강화
-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을 연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

## 4) 효율적 집행 및 전달 시스템 구축

-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별 경영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졸업제 실시
- 농식품 분야 정책자금 관리 기능을 단계적으로 통합
- 정책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보조금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보조금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
## 분야별 보조금 지원

### 1) 직접지불제는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직불제 2대 유형으로 개편

- 공익형 직불: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함께, 기본적인 소득 보전 기능 수행(대상: 공익프로그램 참여 농가) → 현재 쌀(논)고정 직불을 전체 농지로 확대

- 경영안정형 직불(농가단위 소득안정제): 공익형 직불의 소득 보전 바탕 위에 농가별 경영위험까지 관리(대상: 경영 리스크가 큰 주업 농, 농업 소득의 fluctuation 완화)

2)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등 농어촌에 대한 복지 지원 확충

3)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지원 확대

- 초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
-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R&D는 지속 확대
- NT·BT·IT 등 첨단기술과의 융·복합화 지원
-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자재 및 식품산업 지원 확대

4)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

- 토양·물·바다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
- 식품 안전성 강화 및 친환경 농업 확대

## 보조금 지원 질서 개선

1) 보조금의 정책적 효과를 토대로 지원

- 기존 보조사업으로 지원 분야가 정책되었거나 보조금이 없더라도 효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업은 폐지
- 보조금이 사업대상자의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저해하는 사업은 폐지
- 보조금 지원 효과를 평가하여 사업 존속 여부 판단
- 보조금 사업 대상자별 차등 지원으로 지원 효과 극대화

2) 보조금 체계의 단순화, 유형화

- 보조금 사업 통폐합과 병행
- 사업별로 다양한 보조유형을 단순화·통합

### 3) 보조금 개편을 위해 다양한 수단 활용

- 폐지사업, 존치사업, 확대사업, 신설사업, 전환사업 등

## □ 그동안의 농민단체 입장

- 보조금 축소 의혹 제기
- ‘사업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중·소농에 대한 보조를 기업농에 몰아주려는 의도가 아니냐’라는 우려 제기
- ‘농가 소득 안정 및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’라는 우려 제기
- 농민연합은 21일 오전 농식품부에 핵심 농정 의제에 대한 2차 질의서를 발송하고 오는 27일까지 회신을 요청
  - 중·소농에 중심을 둔 식량·가공·유통 정책의 조화
  - 인력 양성 및 유입 계획
  - 외부자본 유입과 기업농 진출
  - 통상절차법 제정
  - 품목별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
  - 학교 급식 직영화
  - 농지 확보
  - 농가 부채 경감 대책
  -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종합대책
  - 쌀 재고량 증가 및 쌀 값 하락에 대한 대책